다산포럼

김정남

시대의 징표와 '2012 대한민국'

2011년은 세계적으로 벅찬 격동의 한 해였다. 그 격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현저하게 축소된 데 반해 중국은 빠른 속도로 그 영향력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위에,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봄부터 독재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와 그에 대한 유혈진압이 아직껏 계속되고 있다. 상위 1%의 탐욕과 부패에 저항하는 99%의 시위가 월가 점령운동으로 나타나더니, 미국의 중요도시를 거쳐 유럽과 전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 시위는 지난 15일 한국에도 상륙하였다. 갖지 못한 99%가 가진 1% 사회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이 시위는 어디서, 어떻게 멈출지 모르게 시공(時空)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은 월가 점령 사태는 경제위기 그 자체는 물론, 그에 대응하는 정치시스템의 무능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더 이상 기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나타난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한국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무능·부패한 한국정치에 대한 탈정치의 움직임이 다름 아닌 안철수·박원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의 정당정치는 지역주의와 이념이라는 분열과 대립의 고질적인 중층구조 위에서 그 존립이 가능했다. 이제 그 구조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은 어느 한쪽의 지역주의 아니면 둘 중 하나의 막다른 이념의 선택을 강요당해왔다.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대한민국 선거역사였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민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했다.

박원순 시민후보의 탄생은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한국의 정치는 이제 '제3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후보 박원순의 당락과 그 이후의 성패는 한국정치의 향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12년의 세계에는 또 다른 정치적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북한에게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게 된다. 세계를 움직이는 두 개의 큰 축이라 할 미국과 중국에서 각기 대통령선거와 제5세대 지도부 출범에 따른 권력이양이 예고되어 있다.

이제 안정과 성장을 되찾아가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강력한 이미지의 푸틴이 재집권에 복귀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 밖에도 프랑스, 인도, 터키, 멕시코, 대만에서도 대통령 또는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2012년은 천하대란이 충분히 예견되는 한 해다.

여기에 맞물려 대한민국 역시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안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대북관계의 교착과 불확실성, 정치·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이미 현재화된 1%와 99%의 대립,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격한 진행,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사회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줄줄이 널려있다. 과연 '2012 대한민국'이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변화하는 세계와 그 시대의 징표를 읽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가진 인물이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놓고 경륜과 언어로 국민 앞에 설득해 낼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두 눈을 씻고 봐도 내 눈에는 그런 이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당판에서는 더욱더 보이지 않는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수요자 중심의 대통령 후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민이 중심이 되어 후보를 옹립하는 '국민후보론'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적인 격동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국가의 비전과, 이 공동체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국가 의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후보를 찾아 추대하자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 전국을 순회하며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선을 통해 국민후보를 확정하자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런 후보를 내고 또 당선시킬 수 있다면 2012년은 우리에게 분명 희망과 전진의 위대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언론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광주U대회 예산 '시민혈세' 절반 넘다니

2015 광주하계U대회를 치르는데 4000억 원 이상의 지방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시 재정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한해 세입이 1조1200억 원에 불과한 광주시로서는 이 같은 지방비 부담이 결국 심각한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U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시설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의 적정 규모는 8276억 원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2642억 원을 국비로, 4466억 원은 지방비, 그리고 나머지 1168억 원은 U대회 조직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운영비 등으로 들어간 23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42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향후 4년 간 매년 1000억 원 가량의 지방비 소요가 불가피한 셈이다.

현재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47.5%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다. 특히 광주의 재정력 지수는 지난해 0.594에서 0.564로 추락한 상태다. 지수가 1보다 크면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자율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시 예산으로 4466억 원을 쏟아 붓는다면 재정 악화는 불보 듯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금부터 U대회가 적자가 아닌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교부세와 지방교부세 등 국고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스폰서 유치 등 마케팅을 통한 U대회 조직위 자체 수입 확대도 모색해야 한다.

적자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이대론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 인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 혼성도박을 벌이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내 모 중소기업 노동자와 이주여성 등 27명이 23일 광주의 한 모텔 객실에서 베트남식 도박인 속칭 '속띠야'를 하다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몸을 숨기려던 2명이 추락사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영암에서도 혼성 도박한 베트남 근로자 19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을 조사하던 중 23일의 도박 첩보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도박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탈·불법 행위는 급증 추세에 있다. 심지어 폭력조직까지 결성하는 등 흉포화·조직화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외국인 근로자가 각종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7265명에 달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인적 관리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10명 중 불법 체류자가 1.2명에 달하고 있어 범죄 대비책 등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도박사건에서 적발된 2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명과 추락사한 2명 모두가 불법 체류자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한치의 차질이 없어야 하지만 탈·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무리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NGO 칼럼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미리 막으려면

장경수

장애인 인권(障碍人 人權)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권, 거주 이주권, 접근권,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 향유권, 선거권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이에 대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의 현 위치 인권에 대한 생각 곧 인권감수성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부터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 시설, 특수교육분야에서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난 8월 10일 광주시는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에 거주하는 장애인 145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휠체어가 있지만, 기어다니면서 운동하라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밤 9시면 취침해야 한다. TV는 볼 수 있다. " "아프면 참는다. 재활교사가 너무 바빠서 아프다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밥 먹고, 쉬었다가, 기도하고, 점심 먹고, 강당에 앉아 있다가 다시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잔다." "아침은 7시 30분, 점심은 12시에, 저녁은 5시에 먹는다."

안타깝게도 이번 조사를 통해, 2005년 장애인생활시설의 모습과 6년 뒤인 오늘의 모습이 거의 발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권과 종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 거주인의 권리나 복지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해주지 않는 시설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각 시설이 위치한 해당 자치구에 불법·부당행위 재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행정처분을 권고토록 하였으며 감금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및 시설장 교체를, 위생불량 및 재활서비스가 부족한 2개소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하나의 인권침해 사례는 6년 전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이다. 특히 인화학교의 성폭력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열풍은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며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 지난 2005년에 발생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접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가해자들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에 무엇보다도 분노하였다. 이렇게 의혹에 대한 전면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경찰이 전면수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해당 학교 재단의 복귀반대와 해체 여부 또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고 국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가니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거주인 전체를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대규모화되어 있는 장애인시설, 관리·감독의 부실, 감시·견제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 낮은 인권의식 등의 문제는 단순히 일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없으며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발의가 되기 전에 검토해야할 주요 내용은 첫째로 시설 내부에서 시설생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과 함께 법인 전반을 내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사회단체장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나아가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근본적인 인권침해 발생근절을 위한 국가의 탈 시설 책임부여와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

기고

남도의 섬 '생태관광 대명사'로 만들자

유영초

태초의 기억, 생명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가서면 분명 섬은 바다를 향하고 있을 것이다. 또 진화의 발자국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호기심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섬은 육지를 향해 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돌아가고 싶든 나아가고 싶든, 어쨌거나 섬은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이음과 디딤의 공간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우리의 '섬'은 영어의 아일랜드처럼 물과 땅의 단순 합성어가 아니라, 단순한 이음과 디딤을 넘어서는 새로운 독자적 개념을 담는다.

'섬 생태관광 국제워크숍(IWIE)'에 다녀왔다. 지난 금요일부터 신안 증도에서 2박3일간 열렸던 행사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도와 신안군이 섬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전남 섬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아마 생태관광과 관련된 학계, 단체, 기관,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섬 생태관광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함께 세워 본 '섬 생태관광의 원칙' 결의는 장차 섬 생태관광의 큰 주춧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태관광의 3요소를 꼽으라면, 아니 어쩌면 이 세 가지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만, 사람과 정(情), 그리고 대자연의 풍광을 들 것이다. 관광은 기본적으로 여행객이 주민 그리고 대자연과 나누는 정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굳이 생태관광으로 이름 지을 필요는 없다.

사실 생태란 뭔가? 용어의 본질을 보자면 생명의 둥지요, 집을 일컫는 말이다. 생태(Ecology)가 Oikos(집)에 어근을 두고 있듯이 생태는 본질적으로 뭇 생명의 둥지이며 고향이다. 따라서 생태관광은 사람들이 집으로, 고향으로,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귀소본능을 충족하는 여행이다.

여행자는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가면 될 것이요, 접객하는 이는 돌아온 가족을 맞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될 것이다. 고향을 찾아온 이가 어떻게 자연을 훼손할 것이며, 고향 아주머니의 호주머니에 지폐 하나라도 더 찔러 넣어드릴 생각을 하지 어떻게 값싼 곳을 찾아 인터넷에서 가격비교나 하고 있을 것인가. 또 쉬러온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라면 접객하는 쪽은 여행객이 어찌 돈으로만 보일 것이며, 자판기 컵라면을 사먹는들 김치 한 종지 내놓지 않을 인심이 어디 있을까.

생태관광은 그 본질상 자연에 대한 책임여행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여행이며, 나그네를 배려하고 객고를 달래주는 소통과 치유의 여행이다.

깊고 푸른 생명의 기억 속에 각인된 멀고 먼 태초의 고향은 바다이다. 그렇게 보면 섬은 돌아갈 수 없이 아득하고 멀고 먼 심연의 바다, 생명의 고향, 그 신비의 둥지를 향해 말없이 서있는 생태관광의 원형지인 셈이다.

질주하던 인류문명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서서 가장 쉴만한 곳은 바로 이곳 섬일 것이다. 섬이야말로 자연과 문명을 사색할만한 최적의 공간이며 생태관광의 가치를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하겠다.

오늘도 병풍도의 갯돌들은 스스로 파도에 눕고 일어서면서 그 어떤 위대한 대지미술가도 흉내 낼 수 없는 신비로운 조형을 연출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이론과 방법과 기술의 성패는 자연에서 얼마나 잘 배우느냐에 달려 있다. 생태관광의 본질에 천착한다면, 이 워크숍을 주관했던 전남대학교 생태관광연구센터가 구상하는 다양한 콘텐츠들도 남도의 섬에서 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풀빛문화연대 대표〉

無等鼓

10·26, 그리고 32년

1979년 10월 26일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커다란 이정표가 세워진 날이다. 1948년 건국 이후 지속됐던 혼란과 경제적 궁핍을 해결했던 박정희 시대가 종말을 고하면서 10·26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비록, 10·26 직 후 '신군부'의 등장으로 10여 년의 암흑기는 거쳤지만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이처럼 한국 현대사의 중차대한 전환점이었던 10·26이 벌써 32년을 맞게 된다. 언론에서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몇몇을 인터뷰하며 그날을 회상하고 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역사를 지켜보았던 여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원이 당시를 진술해 다시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서른 두 번째 맞는 10·26의 감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보다 더 클 사람은 없어 보인다.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문세광의 총에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잃어야했던 박 전 대표. 아버지마저 부하의 총에 숨지는 비극을 당했던 기구한 운명을 지닌 그가 맞는 올 10·26이야말로 그의 정치적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필이면 이날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을 향한 박 전 대표의 발걸음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 전 대표는 원칙과 기본을 고수하며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내년 대선이 머지 않았고, 당내 여론 등을 의식해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정치인 박근혜로서 승부수를 내건 형국이다.

2011년 10월 26일의 밤 우리 국민에게는, 또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 더 많이 실시했으면

놀토문화가 생기면서 학생들은 주말에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 현장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은 흙 구경을 못하는 자녀를 데리고 농촌으로 팜스테이를 떠나거나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일들이 아주 많다. 농촌에 도시인들의 발걸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화와 함께 이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정 주부와 학교 급식 담당자, 영양사 선생님들을 초청하는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 행사를 더 많이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번에 고향에서 관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급식 담당 영양사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행사했다는데 TV방송으로 보는 친환경농업과 달리 유기농업 재배현장에서의 체험행사를 직접 보고는 모두 감탄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현장체험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다 체험 기회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과 똑같은 이치이며 피부에 와 닿는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이제 우리 농촌과 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말로만 학교 급식을 국내산, 친환경, 유기농으로 하자고 외칠 게 아니라 급식을 담당하는 당사자들이 국내산과 유기농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현장체험행사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한 건강농산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모든 정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성희·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